

EU, 농촌지역 고용정책 강화

김 정 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해 말 향후의 농촌개발정책에서는 농촌 지역의 고용 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커뮤니케를 EU 의회에 전달했다. 이 제안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실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새로운 EU 농촌개발정책 안에서 어떤 형태로 현실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1. 배경

2000년 리스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EU 이사회(European Council)은 완전고용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10년까지 실업률을 30% 미만까지 낮추는 것을 중기 목표로 정했다. 그러한 결의의 연장선 상에서 EU 이사회 농업위원회는 2003년 7월에 ‘유럽 고용 전략에 따른 농촌 지역에서의 고용(Employment in rural areas under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농업 인구 고령화, 농촌지역 젊은이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EU 확장, 수정된 공동농업정책(CAP) 하에서 이루어질 농산물 지지에서 생산자 지지로의 전환 등 미래의 유럽 농촌지역이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직면하게 될 몇 가지 도전과 과제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EU 집행위원회가 농촌지역에서의 고용 문제를 심층적으로 전망하고 관련 통계자료에 기초한 논의를 주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skkjs@empal.com 02-3299-4252

2005년 2월 2일, EU 집행위원회는 두 가지 중점 과제 -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질적으로 더 좋은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는 것 -에 초점을 둔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을 제안했다. ‘유럽 고용 전략’에 따라, 더 나은 교육과 훈련이라는 방식으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노동자와 경영체들의 환경 적응력을 신장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과제와 관련하여 CAP(시장정책과 농촌개발정책)의 기본 원칙을 수립했다. 그 기본 원칙이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면서도 강력한 경제적 성과를 낸다.’라는 문구로 표현되었다. 이 원칙은 2006년 6월 16일 EU 이사회가 채택한 ‘EU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에서도 재천명되었다.

새로 수정된 CAP은, 시장정책의 측면에서는 교차준수(cross-compliance)에 따른 생산과 분리된 보조금 정책을 통한 안전망 구축과 소득 안정화를 추구하는 공공개입에 기초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 측면에서는 고용, 성장,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 EU의 ‘농촌개발 전략 지침(Strategic guidelines for rural development)’은 2017~13년 동안에 실행할 농촌개발정책의 우선순위를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성장과 고용을 강조한 리스본 전략과 관계가 있다.

2. 고용 격차

인구 규모, 구성, 경제 구조, 사회구조, 노동시장 등 여러 측면에서 유럽의 농촌지역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많은 농촌지역들이 공통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바로 질적으로 우수하고 지속가능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도시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이다.

2.1. 유럽 농촌지역의 특징

EU 인구의 20%가 ‘현저한 농촌지역(predominantly rural area)’에 거주하고

있으며, 38%가 ‘중간 수준의 농촌지역(significantly rural area)’에 살고 있다.¹⁾ EU-27개국의 총 부가가치 생산액 중 45%가 농촌지역에서 산출된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고용이 총 고용의 53%를 차지한다. 하지만 부가가치 생산과 고용에 관한 이 같은 지표는 ‘현저한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현저한 도시지역에서의 1인당 소득은 현저한 농촌지역에 비해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이 같은 소득 격차로 인해 숙련된 인력을 농촌지역에 유치하거나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다.

표 1 유럽 농촌지역의 특징

	EU-27	현저한 농촌지역	중간수준 농촌지역	현저한 도시지역	지역 구분	연도
토지면적 중(%)	100.0	57.0	35.7	7.3	NUTS 3	2003
인구 비중(%)	100.0	20.5	37.8	41.7	NUTS 3	2003
부가가치생산액 비중(%)	100.0	13.2	31.7	55.0	NUTS 3	2002
고용 비중(%)	100.0	18.7	34.6	46.7	NUTS 3	2002
농경지면적 비중(%)	100.0	43.2	46.8	10.0	FSS	2003
1인당 GDP (EU-25=100, 몰타 제외)	95.5	64.5	82.3	122.8	NUTS 3	2001
총부가가치생산액 중 농업부문생산액 비중(%)	2.3	5.1	2.8	0.9	NUTS 2	2002
총부가가치생산액 중 3차산업부문생산액비중(%)	71.1	62.4	67.9	74.5	NUTS 3	2002

2.1.1. 인구 상황 변화

1) OECD는 지역을 ‘현저한 농촌지역’, ‘중간수준의 농촌지역’, ‘현저한 도시지역’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인구밀도에 기초한 것이다.

최근 몇 십 년 간 EU의 전체 인구 중 농촌 인구의 비율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그 같은 상대적 안정성은 개별 회원국들 간에 그리고 회원국 내에 존재하는 상당한 수준의 편차를 가리고 있다.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지난 15년 동안 나타났던 중요한 인구 변화 양상을 간과하기 쉽게 만든다.

유럽에서는 두 개의 대규모 인구학적 변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원격지에 속하는 농촌지역에서 도시 혹은 도시에 가까운 농촌지역으로 인구와 경제활동을 이동시키는 ‘도시화’의 경향이 정착되었다. 둘째, 보다 최근에는 도시화된 라이프스타일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접근가능한 농촌지역으로 (아마도 새로운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인프라에 힘입어) 옮겨가는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중간 수준의 농촌지역’ 중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대표적인 성장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한 지역의 경제 구조는 점점 더 도시지역의 경제구조와 유사하게 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저한 농촌지역, 특히 원격지 농촌지역은 여전히 인구와 경제활동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연령 구조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 남부지역의 회원국들에서 농촌지역 고령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 비율 측면에서 본다면, 북유럽과 신규 회원국의 인구 과소화 농촌지역에서는 젊은 여성의 전출로 인해 지역 인구의 ‘남성화’ 현상이 중요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유럽 농촌지역의 인구 특성

	EU-27	현저한 농촌지역	중간수준 농촌지역	현저한 도시지역	지역 구분	연도
인구밀도(km ² 당)	114.8	40.9	118.2	638.7	NUTS 3	2003
총인구 중 15~64세 인구 비율(%)	67.2	65.9	67.1	68.0	NUTS 3	2001
순인구이동률	3.9	1.8	4.0	4.8	NUTS 2	2003

2.1.2.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EU-25개국 전체적으로 볼 때, 1996~2001년 사이에 도시지역에서의 고용이 농촌지역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했다. ‘현저한 도시지역’의 경우 고용률이 3.6% 증가한 데 비해 ‘현저한 농촌지역’의 고용률은 1.9%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고용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4년에 EU-27개국 전체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현저한 도시지역’의 고용률은 64.7%로 ‘현저한 농촌지역’의 고용률 60.1%보다 거의 5% 가까이 더 높았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고용률은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떤 농촌지역에서는, 특히 도시근교 지역에서는 고용 증가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OECD 회원국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역 수준에서 살펴보면, 고용 관련 동향은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아주 다르게 나타났다. 주로 농업부문 노동력이 시장 소도읍(market town)이나 큰 마을의 타 부문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표 3 유럽 농촌지역의 고용 특성

	EU-27	현저한 농촌지역	중간수준 농촌지역	현저한 도시지역	지역 구분	연도
고용률(%)	62.7	60.1	61.9	64.7	NUTS 2	2004
실업률 (경제활동인구기준, %)	9.2	9.9	10.1	7.8	NUTS 2	2004
장기실업률 (경제활동인구 기준, %)	4.1	4.5	4.7	3.3	NUTS 2	2004
총고용 중 자영업 비율(%)	15.3	19.3	15.2	13.8	NUTS 2	2004
전체 인구 중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성인 비율(%)	8.5	8.2	7.8	10.1	NUTS 2	2004
1차산업부문 고용률(%)	6.7	20.6	6.9	1.7	NUTS 2	2002
3차산업부문 고용률(%)	66.8	57.1	65.0	74.7	NUTS 3	2002

실업률은 대체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상당히 높다. 도시-농촌 간 실업률 차이는 특히, 실업률이 높은 국가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장기 실업률은 ‘중간 수준의 농촌지역’에서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숨겨진 실업자(고용수준이 낮은 농업인과 농업 노동자 포함)’ 수는 아마도 EU 농촌지역 전역을 통틀어 5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2.1.3. 3차 산업부문의 느린 발전

유럽의 농촌지역에서 서비스업 부문은 가장 많은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도시지역에 비해 더 작고 주로 공공부문에 의한 고용이다. 이는 민간부문의 서비스업이 농촌지역에서는 덜 발달했기 때문이다. 2002년 기준으로 ‘현저한 농촌지역’과 ‘중간 수준의 농촌지역’에서 서비스업 부문 고용 비중은 각각 57%와 65%였다. 이에 비해 ‘현저한 도시지역’의 고용 비중은

75%나 되었다. 이는 지식기반 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더 느림을 시사한다.

2.1.4. 기술과 인적 자본

기술과 인적 자본의 수준도 대체로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더 낮다. 초·중등교육 수준 이상의 교육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더 일반화된 EU 회원국들이 많다. 도시지역에서는 성인 인구의 20%가 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을 경험했다. 반면에 농촌지역에서의 그러한 인구 계층의 비율은 1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대학 이상의 3차 교육이 농촌에서 숙련된 인구를 도시 지역으로 유출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동하는 인구들이 대학 교육을 마친 후 더 나은 고용 기회가 있는 도시 지역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2.1.5. 여성과 젊은이의 고용 기회 부족

농촌지역 여성이나 젊은이들의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연령대에 속하는 여성과 젊은이들의 진출을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떤 농촌지역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인프라구조나 적절한 아동보육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또는 기술능력 향상이 저해되는 경우도 있다. 여성과 젊은이의 실업률은 농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농촌지역에서 여성 실업률은 10.6%이지만 남성 실업률은 그보다 더 낮은 7.9%이다. 도시지역에서 여성 실업률은 6.8%인데 남성 실업률은 6.2%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젊은이의 실업률은 ‘현저한 농촌지역’과 ‘중간 수준의 농촌지역’에서 모두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현저한 농촌지역’과 ‘중간 수준의 농촌지역’에서 젊은이의 실업률은 각각 17.6%와 16%인데 비해 도시지역에서의 젊은이 실업률은 11%이다.

2.1.6. 농업의 위상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1차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은 전체 고용의 10% 미만이다. 그 비중이 5%(5%는 EU-25개국의 평균치임) 미만인 농촌지역의 수도 1/3이나 된다. 그러나 어떤 농촌지역에서는, 특히 EU의 동부와 남

부 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거의 25% 가까이 이른다. 그리고 ‘현저한 농촌지역’에서의 농업생산성은 대부분 매우 낮다.

EU 신규 회원국들의 농업부문을 CAP의 영역으로 통합함으로써, 특히 소득과 관련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연착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EU의 구회원국들에서는 농업 구조조정에 성공을 하는 것이 농업부문의 경쟁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 그리고 고용 증대를 이루는 관건이 될 것이다.

EU-25개국 농업 경영주들 중 35세 미만 계층의 비율은 현재 10% 미만이다. 반면에 65세 이상 계층 비율은 24%를 상회한다. 2000~05년 사이에 EU-25개국에서 농업부문 노동력을 감당한 가장 중요한 주체는 25~54세 연령층 인구였다. 그 다음으로 15~24세의 젊은 계층이었고, 마지막으로 55~64세 연령층의 인구가 농업노동을 수행했다. 농업부문에서 젊은 인구의 수가 줄고 있다는 점은 ‘세대교체의 어려움’이라는 특별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농업인의 교육훈련 수준은 EU 회원국마다 매우 다르다. 혁신, 환경적 서비스 공급, 경영 다각화, 지역 서비스 개발, 바이오에너지 생산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환경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잘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지 못한 농업인들이 많다.

2.1.7. CAP 개혁의 효과와 농촌개발정책

농업부문의 노동구조 조정의 주요 결정요인은 기술 변화, 자본수익률, 타 부문과 비교할 때 농업부문 노동의 상대적 수익률 등이다. 지난 20년 간 CAP을 지속적으로 개혁함으로써, 농업부문의 노동력 유출은 연간 2~3% 정도에서 대체로 안정된 추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 동안 가격지지 감축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직접보조금을 도입함으로써 그러한 재구조화 과정이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했다. 직접보조금이 없었다면, 유럽의 많은 농촌지역들이 커다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다. 농촌개발정책 또한 많은 농촌지역에서 인구감소와 토지 방치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2003년 CAP 개혁을 통해 도입된 디커플링(decoupling)은 고용 측면에서는 중립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과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생산구조 조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욱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장지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전체 경영다각화 및 영농활동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소득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부문에서 일어난 구조조정이 고용에 끼친 영향은 농장에서의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과 농가의 농외소득 활동 증대라 할 수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그러한 과정을 낳고 촉진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리하여 상당한 수의 고용 유지 또는 창출이 이루어졌다. 농장에의 투자, 교육훈련, 임업정책, 농촌지역의 적응 및 발전을 촉진하는 기타 정책 수단 등은 대체로 고용창출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농장에의 투자는 생산성 증대를 통해 농업부문 고용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경제활동 다각화 정책 수단은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EU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적 추정치는 거의 없지만, LEADER II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농촌지역에서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유지되었다. 그 중 반은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였다. 농촌경제 다각화 정책은 농업부문의 많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환경보전이나 농촌마을 재정비 활동과 관련된 임시적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러나 비농업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이나 경제활동 다각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수단들은 농촌개발정책 안에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0~06년 사이에 EU-15개국의 주요 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 중 10% 정도만이 농업 또는 1차 가공부문 외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수단에 할애되었다. 이는 2007년부터 7년간 새로이 시작하는 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는 이 부분의 비중을 상당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3. 고용 측면에서 유럽 농촌지역이 직면한 도전

유럽의 농촌지역은 다양하고, 그 중에는 선도적인 발전을 보이는 지역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어떤 지역은, 특히 원격지, 인구 과소화 지역, 농업의존적인 지역 등은 향후 수년 동안 경제성장, 고용,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특수한 도전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도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낮은 소득 수준
- 그다지 좋지 않은 인구 상황
-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 느린 3차 산업부문 발전 속도
- 기술과 인적 자본의 취약성
- 여성과 젊은이들에 대한 고용기회 부족
- 농업부문과 식품가공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 부족

게다가 유럽 농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현대화는 많은 농촌지역에 무거운 부담을 지을 것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14년까지 EU-15개국에서 농업부문 전일제 노동자 약 20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떠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신규 회원국 10개국만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100~200만 명의 농업부문 전일제 노동자가 탈농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숨겨진 실업자가 5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유럽의 거의 모든 농촌지역들이 이러한 변화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중간 수준의 농촌지역에서는, 기술 부족이나 저소득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원격지 농촌지역에서는 농업부문 고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농업부문 구조조정 과정을 잘 관리하는 일이 농촌 지역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많은 도전들에 직면해 있지만, 농촌지역들은 새로운 산업부문에서

의 성장 잠재력, 농촌 어메니티와 농촌관광 서비스 공급, 정주 공간 및 노동 공간으로서의 매력 등이라는 관점에서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기도 하다. 유럽의 농업은 많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농업 및 식품 부문은 유럽 역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점차 증가할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기술, 혁신 등을 통해 기회를 붙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적응할 수 있는 역량, 기업가 정신, 새로운 기술 등을 개발해야 한다.

4. 고용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유럽의 농촌지역들이 고용과 관련하여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들이 있다. 그와 동시에 EU 수준에서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도농 간의 고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수단들이 존재한다. 농업부문을 뛰어넘는 파트너십 접근방법에 기초한 다부문적·지역적 접근방법과 농식품산업과 농업관광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고용과 경제성장을 위해 농촌개발정책을 완전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07년부터 실행되는 EU 농촌개발정책의 재원인 ‘농촌발전을 위한 유럽 농업 자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에 관한 EU 이사회 결의(Council Decision 2006/144/EC)는 다음과 같이 농촌지역 고용창출 분야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관광, 수공예, 농촌 어메니티 제공 등은 많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며 농가의 농업외 경제활동 다각화나 농촌경제에서의 소규모 비즈니스 발전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아동 보육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지방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들의 노동시장 접근을 촉진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아동보육을 위한 인프라구조 개발도 포함될 수 있다.
- 경제활동 다각화, 비즈니스 창업, 문화유산에 대한 투자, 농촌지역 서비

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구조, 리노베이션 등을 결합한 종합적인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서의 경제적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다.

- 전통적인 기술에 기초하거나 새로운 기술 역량을 도입한 소규모 비즈니스나 수공업 등을 개발한다.
-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경제 다각화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킨다.
- 정보통신기술 확산을 촉진한다. 그리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원 공급과 그 혁신적 활용을 촉진한다.
- 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소규모 지방 인프라구조를 확보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자금 투자를 다각화나 농업 및 식품부문 잠재력 개발을 위한 지방 수준의 개발전략에 연계할 수 있다.

유럽의 농촌지역들이 장래에 직면하게 될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인적 자본과 기술에 중점을 두고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 정책을 통합하는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성장과 고용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EU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시장지향성 증대와 직접보조를 통한 소득증대를 수반하는 CAP 개혁과정은 계속 되어야 하고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 EU 회원국들은 에너지 작물 재배와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지역 고용을 안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많은 농촌지역들이 특별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신규 회원국들

의 EU 가입과 그 나라들에서의 농업 구조조정 문제는 정책 측면에서 향후 수 년 간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 2007년부터 7년 간 실행될 내용을 담고 있는 ‘EU 농촌개발정책 전략 가이드라인(Community Strategic Guidelines for rural development)’의 연장선 상에서 회원국들은 지식 이전, 현대화, 혁신, 식품공급 사슬 내에서의 품질 향상, 인적 자본에의 투자, 고용기회 창출 등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국의 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 농촌개발정책은 고용격차를 줄이는데 있어 일정 부분의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EU의 정책 수단들을 모두 동원하여 농촌지역에서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구조정책, 고용정책, 농촌개발정책 사이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 인적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활동은 ‘유럽 고용 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의 목표와 완전히 호환되는 가운데 실천되어야 한다. 모든 회원국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맥락 안에서 농업부문 내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해야 하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및 재취업 교육훈련 분야에서 사전적인(proactive) 접근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농촌개발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 틀(Common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for Rural Development)’의 맥락 안에서 농촌개발정책이 고용 분야에 어떤 효과를 낳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통계적 수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참고자료

http://europa.eu/agriculture/rurdev/index_en.htm(EU 집행위원회) 발췌·정리